

돌봄교실 주변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미미'

SOCIETY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광주·전남 내부 설치 2만5606대 중 60대 불과 “대다수 복도·계단... ‘김하늘양 참변’ 떠올려야”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147개교에 설치된 CCTV는 2만5606대(광주 7407대·전남 1만8199대)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80개교(광주 155개교·전남 425개교)에 8399대(광주 2461대·전남 5938대), 중학교 341개

교(광주 91개교·전남 250개교)에 7000대(광주 2216대·전남 4784대), 고등학교 211개교(광주 68개교·전남 143개교)에 9823대(광주 2602대·전남 7221대), 특수학교 15개교(광주 6개교·전남 9개교)에 384대(광주 128대·전남 256대) 등이었다.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실내 1만82대(광주 3000대·전남 7082대), 실외 1만5524대(광주 4407대·전남 1만1117대)이다. 하지만 돌봄교실 주변보다는 복도와 계

단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실제 실내에 설치된 CCTV 중 돌봄교실 주변에는 총 60대(광주 17대·전남 43대, 0.2%) 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0대(광주 9대·전남 31대), 중학교 8대(광주 4대·전남 4대), 고등학교 5대(광주 3대·전남 2대), 특수학교 7대(광주 1대·전남 6대) 등이다. 설치 비율로 보면 복도 및 계단 6204대(24%), 로비 999대(3.9%), 강당 및 체육관 244대(0.95%) 등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교실 77대(0.3%), 보건실 48대(0.18%), 시청각실 38대(0.14%) 등으로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학교 안

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학교 내 CCTV 설치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외부 출입로 외에는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도 없다. 더구나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학교의 장이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현재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도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 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초·중·고·특수학교 내부에 설치된 CCTV 3만7008대 중 돌봄교실 주변에 설

치된 CCTV는 1767대로 4.7% 수준이다. 김용태 의원은 “고 김하늘양 참변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안 개정을 통해 복도 및 계단, 돌봄교실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김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에서도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의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48 달동 16:44
맑음 18:37 맑음 05:50



광주	7~14
목포	6~12
여수	7~14
순천	6~16
구례	5~16
광주	5~14
임도	6~15
흑산도	7~11
고흥	4~15
진도	5~13

목포	밀물(고)	00:58 / 13:41
	썰물(저)	06:20 / 18:56
여수	밀물(고)	08:32 / 20:41
	썰물(저)	02:02 / 14:35

마약 상습투약 40대 구속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1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A씨는 정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검거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자택에서는 투약 기기와 필로폰 0.1g이 발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 투약과 소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 경찰은 마약 판매과유 통칙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이산하 기자 goback@

“국가보훈부 사과해야” 규탄 목소리 오월 단체 등 “尹 비판 성명,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

오월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이유로 압박을 가한 국가보훈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는 11일 “보훈부는 5·18단체에 보낸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5월 단체들이 12·3 계엄 뒤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묻지 않고 자 했다면 문제 제기는 이미 수차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훈부가 문제 삼은 것은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 한 번 뿐이다. 단체는 “12·3사태는 정당한 계엄의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계엄으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헌적 내란 행위였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위험자의 불법적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훈부가 내세운 ‘정치적 중립의무’를 본인들이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가슴팍에 총칼을 겨누는 자가 풀려나 활개 치는 상황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5·18에 대한 폭력이며, 권한을 남용한 일이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야 할 기관이 내란 수괴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막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비난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을 수립하고, 향후 5·18민주화운동 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5·18 단체의 정당한 주장에 제갈을 물리려는 보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5월 단체들이 12·3 계엄 뒤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묻지 않고 자 했다면 문제 제기는 이미 수차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훈부가 문제 삼은 것은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 한 번 뿐이다. 단체는 “12·3사태는 정당한 계엄의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계엄으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헌적 내란 행위였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위험자의 불법적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훈부가 내세운 ‘정치적 중립의무’를 본인들이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가슴팍에 총칼을 겨누는 자가 풀려나 활개 치는 상황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5·18에 대한 폭력이며, 권한을 남용한 일이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야 할 기관이 내란 수괴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막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비난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고로쇠 수액 채취 11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 자락에서 가인마을 주민들이 '신비의 약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속속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 횡령 정황

인터넷뱅킹 기록 조작 허점 노려...10년간 ‘아름아름’ 25년차 경리직원 잠적...부실 회계감사 등 제도 한계 15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수억원대의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한 가운데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광주 관산경찰에 따르면 관산구에 위치한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4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5년차 경리 직원 B씨가 직원 월급날인 지난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인출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보니 1원도 없었다”며

조작해 의심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잔액증명서 등 회계 자료·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적 감시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감사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가 많은 데다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작성하고 꾸며놓은 서류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내역을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회계 내역을 속인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h4415@gwangnam.co.kr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대로 173 대연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